

사죄 없는 일본...결정 미룬 법원...눈물짓는 할머니

강제동원 양금덕 할머니, 광주 찾은 박진 장관에 "일본에 왜 할 말 못하냐"

주심 대법관, 미쓰비시 자산 현금화 사건 선고 없이 퇴임
박진 장관 "의견서 제출 법령에 따른 것...철회의사 없다"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인 순천 출신 김성주(93) 할머니 관련 대법원의 미쓰비시 자산 강제매각(특별현금화 명령) 결정이 또 기약없이 미뤄졌다. 김성주 할머니 사건의 주심 김재형 대법관은 지난 2일 사건을 결론짓지 않은 채 퇴임식을 열고 임기를 마무리했다.

당초 김성주 할머니 사건은 김 대법관의 임기가 만료되는 4월에 앞서 결론이 나올 것으로 기대를 모았다. 지난 4월 미쓰비시 측 재항고를 받아 5개월여 동안 상당 부분 심리가 진행됐다고 알려지기도 했다.

그러나 김 대법관이 매듭을 짓지 않고 퇴임하면서 신임 대법관이 사건을 파악하고, 업무분장을 새로 짜는 등 거쳐야 할 과정이 늘었고 김 할머니 위자료 지급을 위한 강제집행도 그만큼 늦춰지게 됐다.

이에 따라 같은 내용으로 재항고 심리가 진행 중인 나주 출신 양금덕(93) 할머니 사건 역시 기

약 없이 미뤄질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법조계 안팎에서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해 피해자 측은 정부가 사건 심리 중인 대법원에 '의견서'를 제출한 영향으로 선고가 늦어진 것이 아니냐며 반발하고 있다. 외교부는 지난 7월 26일 (미쓰비시증권업 자산 매각 결정시) 대일 관계에 악영향이 우려된다며 사실상 선고를 늦춰달라는 내용을 담은 의견서를 대법원 재판부에 냈다.

이에 박진 외교부 장관은 지난 2일 광주를 찾아 양금덕 할머니 등 피해자들과 면담했으나 반발은 수그러들지 않는 상황이다.

박 장관이 "정부가 책임감을 갖고 강제 징용 문제를 빠르게, 합리적인 방안으로 풀겠다"면서도 "외교부 의견서 제출은 법령, 절차에 따른 정당한 것이었다. 철회할 생각은 없다"고 못박았기 때문이다.

양금덕 할머니는 박 장관을 만나 자필 편지를

전달하며 "일본 정부와 전범기업에 우리 정부가 할말은 해야 한다"며 고 강조했다. 양 할머니는 박 장관에게 "돈 때문이라면 진작에 (소송을) 포기했다. 일본의 사죄-배상 전에는 죽지도 못한다", "우리 정부 무슨 말 한마디 못하고 있다. 무엇이 무서워서 말 한 자리(마디) 못하느냐"고 외교부 등 우리 정부의 대일 정책 태도를 비판했다.

일본 전범 기업 한국 내 자산 현금화 결정은 30년 전부터 한-일 양국을 오가며 이어져 온 '장기전'이었다.

지난 1992년 이금주 태평양전쟁희생자 광주 유족회장이 일본 정부와 기업을 상대로 낸 '천인소송'이 시발점이었다. 양금덕 할머니 등 강제동원 피해자들을 규합해 모아 도쿄지방법판소에 손해배상 소송을 건 것이다. 이 소송 외에도 여러 소송이 일본에서 이뤄졌으나 강제동원 관련 소송은 2008년 일본 최고재판소에서 최종 패소했다.

일본 법원을 통한 배상길이 막히자 양 할머니 등 피해자들은 한국 법원에 문을 두드렸다.

2012년 양금덕 할머니 등 피해자 5명이 미쓰비시증권업을 상대로 손해배상(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결국 2018년 원고 승소 확정 판결을 받아냈다.

하지만 일본 정부와 피고기업 미쓰비시증권업은 "1965년 한일청구권 합의가 이뤄졌으니 더 이



박진 외교부 장관(왼쪽)이 지난 2일 광주시 서구 양동의 일제강제동원 피해자 양금덕(93) 할머니 자택을 찾아 양 할머니가 직접 쓴 편지를 전달 받아 들여보고 있다. <(사)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 제공>

상 책임이 없다"는 핑계로 배상을 거부했다. 이에 양 할머니 등 피해자들은 2019년부터 미쓰비시 자산 압류 명령과 현금화 명령을 잇따라 법원에 신청하기에 이른다. 미쓰비시 측이 위자료 지급을 수년째 거부하고 있으니, 법원이 피고

기업의 한국 자산을 강제로 매각해 피해자들에게 위자료로 달라는 취지였다. 4일 현재 김성주-양금덕 할머니 사건은 강제집행 명령에 대한 재항고 단계까지 진행돼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유연재 기자 yjyou@

광주·전남 연구소 안전사고 빈번

5년간 50건·60명 다쳐...모 대학 실습 중 결핵 집단 감염도

최근 5년간 광주·전남지역 연구소에서 50건의 안전사고가 발생해 60명이 다친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정문(충남 천안 병) 의원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받은 자료 분석결과, 2017년~2022년 6월까지 전국의 연구실에서 발생한 안전 사고는 모두 1248건으로 집계됐으며 매년 증가 추세다.

광주·전남지역 연구소 안전사고를 연도별로 보면 2017년 8건(8명 부상)→2018년 8건(9명 부

상)→2019년 6건(9명 부상)→2020년 13건(19명)→2021년 11건(11명)으로 매년 6~13건 발생했다. 올해 들어서도 6월까지 4건의 안전사고로 4명이 다쳤다.

주요 사례를 보면, 2020년 10월 광주의 한 대학교 선의학(생물) 계열 실습 중 결핵 바이러스가 학생 7명에게 감염됐다. 실습 도중 결핵 환자로부터 다수의 학생이 감염된 것이다.

이 의원은 연구실 안전사고가 제때 보고 되지 않는 점도 지적했다. 연구 활동 중사자가 의료기관에서 3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생명 및 신체상의 손

해를 입은 연구실사고가 발생한 경우, 연구소의 장은 사고 발생일로부터 한 달 이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게 보고하도록 규정됐다. 하지만 사고 발생부터 보고까지 전국 평균 기간은 40.6일로 규정을 10일 넘게 초과하고 있다는 것이다.

전남도보건환경연구원은 지난해 1월 6일 사무실에서 미생물실험실로 이동 중 발생한 안전사고(넘어선 사고)를 2개월이 지난 3월 29일 보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정문 의원은 "연구소는 대학연구기관 지자체·관공서 관련 연구소 등이 대부분으로 이곳에서는 의학·생물·화학·화공 등의 실험이 진행된다"며 "특히 동물 실험, 세균·바이러스 배양 등 감염 우려가 있는 의학·생물 분야 연구소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하면 코로나19와 같은 바이러스 감염 등이 생길 우려도 있다"고 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광주·전남 매년 뱀 물림·벌 쏘임 2400명

광주·전남에서 매년 뱀에 물리는 사고를 당하는 지역민은 400여명, 벌에 쏘이는 지역민은 2000여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국회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인제근(서울 도봉갑)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2017~2021년)간 뱀 물림과 벌 쏘임으로 청구된 건강보험료는 총 204억 원으로 나타났다.

광주·전남에서는 뱀 물림으로 청구된 건강보험료는 23억4300만 원으로 매년 500여명에 가까운 지역민이 진료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

는 2017년 494명→2018년 483명→2019년 497명→2020년 429명→2021년 495명 발생했다.

이 기간 광주·전남에서 벌 쏘임으로 청구된 건강보험료는 7억1600여만 원에 달했다. 벌 쏘임으로 진료를 받은 광주·전남 환자는 2017년 3069명→2018년 2630명→2019년 2326명→2020년 1573명→2021년 2319명으로 나타났다.

이송된 환자의 3명 중 1명 이상은 의식장애·호흡 정지·심정지 등 중증 피해를 호소한 것으로 분석됐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윤창호법' 손 본다...가중처벌 요건 구체화

경찰, 현재 위헌 결정에 개정 추진

경찰청이 음주운전이나 음주 측정 거부 2회 이상 한 사람을 가중처벌하는 내용의 '윤창호법' (도교통법 148조의2 1항) 개정을 추진한다.

헌법재판소가 윤창호법에 대해 세 차례 위헌 결정을 하자 보완에 나선 것이다.

4일 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청은 해당 조항의 처벌

수위는 그대로 두되 과거 음주운전 및 음주 측정 거부로 벌금형 이상을 받은 자가 형이 확정된 이후 10년 이내 다시 위반하는 경우로 구체화한 법 개정을 검토하고 있다.

윤창호법 위반은 음주운전을 하거나 음주 측정을 거부한 자에 대해 기간 제한 없이 2회 이상 위반한 경우 2~5년의 징역형이나 1000만~2000만원의 벌금형으로 가중처벌하도록 했다.

이에 대해 현재는 음주 전력의 종류와 시간적 제한 없이 법정형을 과도하게 높여 가중처벌하는 것은 책임과 형벌 간 비례원칙 위반이라고 보고 위헌 결정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지적을 받아들여 가중처벌 요건을 명확히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11월 현재의 윤창호법 첫 위헌 판정 이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는 다수의 개정안이 계류 중인데 경찰청 추진안은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이 지난해 12월 대표 발의한 개정안과 같다.

/연합뉴스

공·사립유치원에 투명창 마스크 지원

광주시교육청, 언어·사회성 발달 지원 예방 위해

광주시교육청이 광주지역 전체 공·사립유치원 유아 및 교원에 대해 비말 차단용 투명창 마스크를 지원한다.

시교육청은 "유아들의 언어 및 사회성 발달 지원을 예방하기 위해 투명창 마스크 지원 사업을 실시하기로 했다"고 4일 밝혔다.

시교육청은 이번 사업에서 KC인증된 제품으로 몰이나 알코올로 닦아 재사용이 가능한 투명창 마스크를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전체 공·사립유치원 교사와 유아 등 2만2900명으로 지원금액은 1인당 3만원 꼴이다. 사업 예산은 모두 7억3000여만원이다.

이정선 교육감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교사들의 마스크 착용 장기화로 유아의 언어발달이 지연된다는 전문가의 의견과 교육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투명창 마스크를 지원하게 됐다"고 밝혔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 1 반경 1km내 아파트 및 오피스텔 7000여 세대 상권유입 가능
- 2 아시아문화전당 인접, 예술의 거리 및 음식의 거리 방문 고객 확보
- 3 사옥 5층 문화센터 상시운영 (골프클럽, 요가, 갤러리)가맹고객 확보
- 4 지하철 2호선 개통시 접근성 양호, 유동인구 폭발 증가



금남새마을금고

주최: 금남새마을금고

MG골프클럽

구분	이용 기간	정상 이용료	금남새마을금고 이용자 할인 특가 (원)		
			30점 이상 (10%)	40점 이상 (15%)	50점 이상 (20%)
정기 회원	1개월	200,000	180,000	170,000	160,000
	3개월	570,000	513,000	484,500	456,000
	6개월	1,080,000	972,000	918,000	864,000
	12개월	2,040,000	1,836,000	1,734,000	1,632,000

* 이용자 할인 특가 문의 (영업지원팀)
* 락카비 - 월 10,000원 (6개월 이상 등록자 무료)
* MG체크카드 이용 시 이용금액의 5% 추가 할인 (최고 2만원 할인)
* 유명 골프 프로 레슨 중

사옥 임대 문의 (영업지원팀)

5층 MG문화센터 회원 大모집

요가, 노래교실, 라인댄스 상시 운영 중

광주광역시 동구 중앙로 207-7(대인동) ☎ 062-223-8007